

#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20대 청년의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박나리\*\* · 김교성\*\*\*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청년 불안정성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그 양상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심각해지는 청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청년의 불안정성은 '청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소득, 부채와 관련된 안전성(security)이나 안정성(stability)의 결여'로 정의하였다. 청년패널조사(YP2007)에서 만23세~만29세 청년의 자료를 추출하여 병합하고, 고용, 소득, 부채 변수를 활용하여 집단중심다중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 불안정성에 대한 7년간의 궤적과 유형을 도출한 결과, 동태적 특성과 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포착할 수 있었다.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은 연령에 따른 변화 양상에 따라 상이한 6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약 12%를 제외한 모든 청년이 일정 수준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며, 청년의 불안정성은 만23세에서 만28세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재구조화, 보편적 소득보장, 상보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청년 불안정성,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부채 불안정, 집단중심다중추세분석

\* 이 논문은 2021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과 '2021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skfl745@naver.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kyoseong@cau.ac.kr)

## 1. 서론

불안정 사회의 도래로 획일화되었던 청년층의 생애과정이 이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청년이 이토록 불확실한 출발선에 서게 된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으로 사회구조가 재편되면서 사회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장된 데 있다. 외환위기와 기술발전은 후기산업사회의 진입과 증첩되어 구조적 변화로 이어졌으나,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이행기 청년들을 중심으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확장되었다. 특히,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의 증가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였고, 표준고용계약 관계의 해체와 비전형 노동(atypical work)의 증가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은 악화되었다.

경쟁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장려되는 방안은 개인의 인적자본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소수의 질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청년들은 더 높은 학력과 스펙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채무를 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장기적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다.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면서,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난항이 생기자 소득, 주거, 금융의 연쇄적 문제로 이어졌고, 생애과정은 다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연대를 경험해본 적 없는 청년세대에게 실패는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거시경제적 변화로 촉발된 청년 불안정성 문제가 인지되었고, 청년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주목하여, 미시적 차원의 인적자본론(Näswall and Witte, 2003; 박성재·반정호, 2012; 남재욱·김영민·한기명, 2018)과 지위획득이론(노혜진, 2012; 김종성·이병훈, 2014; 김영미, 2016; 이경희·민인식, 2016), 젠더 관점(Vosko, MacDonald and Campbell, 2009; 유정미, 2017; 김안나·홍현우, 2018; 오유진·김교성, 2019)에서 이행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심을 두었다.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 분석도 등장하여(Maestripieri and Sabatinelli, 2014; 이승윤·백승호·김윤영, 2017; 이정아·김수현, 2017), 미시 연구의 한계였던 고학력 청년층의 불안정성 증가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청년 불안정성의 논의는 근로빈곤층(변금선, 2012; 김문길 외, 2015; 김태완·최준영, 2017; 전경숙·송영호·채창균, 2019), 주거(정민우·이나영, 2011; 최은영, 2014), 부채(이세미·이지연, 2016; 변금선, 2019)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질성이 두드러지는 청년을 19~29세, 19~34세, 19~39세 등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의 20대 초반과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 직장생활을 하는 30대 초·중반의 청년은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생애주기 단계를 기준으로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불안정성을 단일 차원에서 횡단적으로 관찰하여 다차원적 불안정성을 추적하

는데 한계가 있다. 노동시장 이행이나 근로빈곤, 주거, 부채 등 단일 차원과 시점의 접근에 머물러, 불안정성의 역동적 효과를 종단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청년의 불안정성은 개인의 이행 경험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여부와 고용지위, 소득 수준, 부채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행기의 특성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단일 시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학령기를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과정을 경험하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불안정성에 관한 종단적 변화의 궤적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청년 불안정성은 청년기 보편적 문제로 언급될 수 있는 고용과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년들은 각자 이질적인 삶의 궤적을 가지기 때문에, 종단적인 관점에서 청년의 불안정성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갖는지 증감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가지 변수를 선택한 이유는 기술발전, 노동시장 유연화와 금융화 등으로 고용지위와 소득, 부채 변수의 결합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청년 담론은 특정 연령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집단 내 존재하는 이질성과 교차성은 무시한 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간주해왔다(문유진, 2018). 청년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양상으로 구현되고 유형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용을 중심으로, 엄격한 자격기준을 요구하는 청년 정책이 불안정성을 감소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제시는 우리 사회에 많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1) 불안정 사회의 도래와 청년 문제의 배경

불안정 사회가 도래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맞닿아있다. 경제적 개방, 정보화, 금융화로 표현될 수 있는 세계화는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조응하여 탈규제 및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채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개방경제의 출현은 근대사회 고정체의 균열과 침식으로 이어졌으며, 후기산업사회에 들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김교성, 2016: 212).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다방면에서 발생하였지만, 본 장에서는 청년들의 불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노동시장 유연화와 금융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가 확대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근대사회 표준고용관계 하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명문화하여 법적 보호를 받았으나, 유연화 전략은 표준고용관계의 성립 자체를 무효화하였다. 외부화, 외주화, 자동화의 도입으로 괜찮은 일자리는 양적으로 축소되었고, 고용의 진입과 퇴출, 업무의 할당과 직무의 이동성, 보상 수준과 구조 등이 모두 유연해지면서(Regini, 2000: 6) 다양한 조합의 비전형 고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분절적이고 유연화 된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은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386세대가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시장에 청년층이 좋은 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 기업 조직이 노령화됨에 따라, 연공제를 고수하는 기업의 총노동비용이 상승하게 되었고, 총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 젊은 세대에 대한 신규채용을 축소하였기 때문이다(이철승, 2019: 237). 또한 최저임금, 사회급여, 엄격한 고용보호, 보험원칙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가 제공되는 표준화된 고용은 비전형적 고용에 비해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들은 비전형 고용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청년은 이에 노출된 대표적인 인구집단이다.

한편, 금융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증권화나 자산 유동화를 특징으로 한다(지주형, 2011: 89).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이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제조업 부분의 이윤율이 하락하고 금융, 보험, 부동산 등 비제조업 부분의 이윤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윤홍식, 2019: 33). 금융기법의 발달과 금융시장의 성장은 저소득이거나 중간소득의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허용하면서 '일상의 금융화'를 이끌어낼 정도로 지배적인 사회질서가 되었다(지주형, 2011: 69).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크게 확장되었고, 공공부채 대신 가계부채가 가계의 구매력을 유지시켜주는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김도균, 2018: 202).<sup>1)</sup> 최근에는 부채의 확산이 청년층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실업의 위협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고헤력과 고스펙은 필수품이 되면서, 학위, 자격증, 인증서 등의 고비용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부채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분석한 청년층(20~39세)의 부채보유 비율은 24.5%로 중장년층의 42.5%보다 낮지만, 노년층 16.5%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가구주로 한정하면 청년층 부채보유 비율은 61.5%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오욱찬·김현경, 2020: 265-280).<sup>2)</sup> 일반적으로 청년 부채는 학자금 대출이 전부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부채 문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고용불안, 소득불안, 주거불안 등 다차원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근근이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3)</sup> 부

1) 이러한 현상은 '민간주도 케인즈주의(Privatised Keynesianism)'라 명명되었다(Crouch, 2009: 390).

2) 청년층의 평균 부채 잔액은 1,611.6만 원이지만, 부채를 보유한 청년의 부채 잔액은 평균 6,584.8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마련을 위한 부채(65.1%)가 가장 많다(오욱찬·김현경, 2020: 267).

채는 신용상태에 따라 접근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중성을 갖는다. 다만, 청년의 경우 주로 주거비, 생활비, 학자금을 목적으로 채무를 얻는 경우가 높으며(김형주·연보라·유설희, 2019: 157-159), 투자의 개념보다는 기본적 욕구(주거, 생활비)와 역량강화(학자금 등)를 목적으로 한다. 학비와 주거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이 학자금 대출이나 부채를 갖게 되는 것은 마이너스 출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 부채는 미래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2) 청년 불안정성

### (1) 청년 불안정성의 개념

불안정성(precariousness)은 '위험성(risky) 혹은 안전성(security)이나 안정성(stability)의 결여'를 의미한다(Standing, 2011; Stuth and Jahn, 2020). 불안정성은 다차원적이며, 성, 연령, 계급, 특정 인구집단 및 직업집단 등과 복합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이승윤 외, 2017: 61). 일반적으로 불안정성의 개념은 주로 고용과 연계되어 사용되었다. 고용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지 못할 때 불안하다고 정의되는 것이다(Vosko, MacDonald and Campbell, 2009; Stuth and Jahn, 2020). 그러나 표준고용관계가 성립해도 사회적으로 정의된 다양한 영역의 최소수준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비표준 고용관계 일지라도 항상 불안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는 불충분하다(Stuth and Jahn, 2020). 새로운 불안정성 개념이 요구되며, 우선 불안정 노동의 수준으로 확장하여 논의해야 한다.<sup>4)</sup>

ILO(2012: 27)는 불안정 노동의 대표적 특징으로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다양한 수준과 정도의 법적 지위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에 대한 주관적 느낌 등을 언급한다. Rodgers and Rodgers(1989: 3)는 불안정 노동은 불확실성의 정도(the degree of certainty of continuing work), 노동에 대한 통제력(control over work), 법과 집단적 조직 또는 관행에 의한 보호나 사회적 보호(protection), 소득(income)이라는 다차원적 측면을 가지는 것이라 주장한다. Standing(2011)은 노동시장 보장, 고용보장, 직무 보장, 근로안정 보장, 숙련기술 재생산 보장, 소득 보장, 대표권 보장이 결여된 사

3) 서울시 청년허브 기획연구로 진행된 청년연대은행 토닥 부설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부채의 문제는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기 전 나타나거나 대학을 가지 않은 비진학 청년들에게 심각하게 발현된다(한영섭·이유란, 2015).

4)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과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은 구분되는 개념이다. 불안정 노동은 고용조건을 포함하여 소득, 사회적 임금의 배제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불안정함을 언급하는 개념으로 일자리의 질과 유사하다. 불안정 고용은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고용조건(고용형태, 근로제공 방식,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불안정 노동의 하위범주에 포함된다.

람들을 ‘프레카리아트’라 정의한다. 이러한 담론들을 통해, 불안정 노동이 단순히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다차원적 현상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불안정성은 고용 시스템의 탈규제, 제도변화의 지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노동을 넘어 삶 전반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예측이 어려워지고 변동성이 심한 상황은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하며, 대안들 사이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결과에 대해서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된다(Mills and Blossfeld, 2005: 16-17). 청년들은 제한된 정보와 부족한 경험으로 인해 합리적 의사결정에 특히 취약하다.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이들을 보호해줄 사회적 장치나 기업 내부의 보호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부실하고, 고용주들은 제한된 협상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며, 해당 위험을 청년들에게 전가하고 있다(Stuth and Jahn, 2020).

Standing(2011)은 청년층을 임금이 적고 불확실한 일자리에 포진하며, 일자리 자체에 접근할 통로와 관련한 교섭 입지는 없는데, 수당도 턱없이 부족하여 빈곤에 취약해지는 집단으로 설명한다(Standing, 2011: 141). 그리고 교육을 ‘대다수 구매자에게 경제적 수익이 없는 투자재로 판매되는 사기’라고 비판한다. 사회는 교육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라고 부추기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청년층은 이를 위해 채무를 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의 소득도 부채를 청산하기에 너무 적은 수준이다. 심지어 그러한 일자리는 경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Standing, 2011: 157-158). 그 결과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표준화된 이행은 교육, 훈련, 노동의 기간과 실업 기간의 복잡한 조합으로 대체되며 불확실성을 확장시키고 있다(Antonucci, Hamilton and Robert, 2014: 1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 불안정성을 ‘청년기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소득, 부채와 관련된 안전성(security)이나 안정성(stability)의 결여’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청년의 불안정성은 다차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먼저 고용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표준화된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다양한 지위로 파편화되면서 고용 지위의 불안정성 정도가 다양화 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도 단순한 이분법적 가정인 ‘좋은’ 연속적 표준 고용과 ‘나쁜’ 불연속적 비표준 고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Frade, Darmon and Laparra, 2004; Stuth and Jahn, 2020). 저임금의 표준 고용 역시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지위는 소득 수준과 구분되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 불안정성은 임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 차원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이 시대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 자체가 늦어지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활용한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게 되

5) 일은 단순히 0 아니면 1인 활동이 아니며, 21세기 노동시장은 더 복잡한 형태와 양상을 띠고 있다(Atkinson, 2015: 198).

었고, 부모로부터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청년기에 발생하는 이러한 특성은 전일제 근로를 통한 수입인 임금 이외의 총소득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전일제 근로 수입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종합하여 소득 불안정성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밖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 불안정까지 포괄하고자 한다.

마지막은 부채 불안정성이다. Standing(2011)은 청년기의 부채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특히 강조한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학자금 대출의 양적 규모는 부채 변수를 포함해야 할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늘어나는 생활비와 주거 부담 증가 역시 부채 불안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청년기의 적은 소득만으로는 끝없이 상승하는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부채를 통해 보충할 수밖에 없다. 금융화는 과거보다 부채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부채 역시 청년기 불안정성의 핵심 요소로 정의하고자 한다. 세 차원의 불안정성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청년 불안정성을 고용과 소득, 부채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sup>6)</sup>

## (2) 청년 불안정성의 실태와 특성

세계적 현상이 된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금융화, 굳건한 이중노동 시장은 청년들의 삶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21세기의 청년들은 과거보다 더 많이 배우지만, 더 어려운 취업시장 앞에 직면해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학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부(2020)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5년 51.0%에서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 65.0%가 되었고, 2019년 69.8%로, OECD 평균은 45.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들의 고학력화는 긍정적인 노동시장의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25~34세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2008년 74.0%에서 2018년 76.0%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OECD 평균인 84.0%보다 8.0%p 낮은 수준이다(OECD, 2019: 78). 특히 고등교육 이수 여성 고용률은 2008년 65.0%에서 2018년 71.0%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OECD 국가의 여성 고등교육 이수자 고용률 평균 81.0%에는 한참 부족한 수치이다. 이는 청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특히 어려운 현실을 나타낸다. 남성의 경우에는 2008년 84.0%에서 2018년 82.0%

6) 불안정 노동과 관련한 논의에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도 빠지지 않는 속성으로 언급된다(Rodgers and Rodgers, 1989; 이승윤 외, 2017; Stuth and Jahn, 2020).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주요 변수에서 제외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상 불안정 고용이 사회보험 불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이중구조화로 인해 사회보험과 고용 지위가 연계되어 있으며,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연구한 선행연구(이승윤 외, 2017)에서도 이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 OECD 국가 남성 고등교육 이수자 고용률 평균 89.0%보다 낮게 나타난다. 최근 청년들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이다.

청년의 고용상황도 좋지 않다. [그림 1]을 보면,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은 2010년 40.1%에서 2013년 39.5%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4년 들어 40% 수준을 회복하여, 2019년 43.5%를 기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9세의 청년 고용률은 2010년 58.4%에서 2019년 58.2%로 감소한 반면, 15세 이상 10대 고용률이 2010년 6.1%에서 2019년 7.6%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中等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15~19세의 고용률이 한자리 수를 기록하여, 청년 고용률의 평균을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고용률은 2010년 58.9%에서 2019년 60.9%로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년들이 전체 집단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34.0%에서 2019년 40.4%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보건복지부, 2019: 120).<sup>7)</sup> 15세 이상 전체 연령의 비정규직 비율도 2013년 32.5%에서 2019년 36.4%로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청년의 비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은 전체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비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임금수준의 현황도 좋지 않다. [그림 2]는 2020년 5월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이다. 청년들이 첫 일자리에 취업하여 받은 임금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6.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5월 동일 범주의 79.4%에 비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청년의 저임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근속근무가 어려워진 시점에서 낮은 임금수준은 청년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난과 소득 감소로 인해 부채 부담이 커지고,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삶의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기현·이윤주·유설희,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김형주 외, 2019: 157-159)에서 발간된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에 따르면, 20~39세 청년들의 경우 은행, 제2금융권, 대부업체 혹은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라는 비율이 2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25.1%) 대비 2.4%p 상승한 결과이다. 채무 발생 원인은 '주거비 마련'이 59.6%로 가장 높고 '학자금 마련'이 21.2%, '생활비 마련'이 9.6% 등이다.<sup>8)</sup> 등록비와 생활비를 목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이용학생 비율은 2013년 1학기 14.9%, 2학기 16.2%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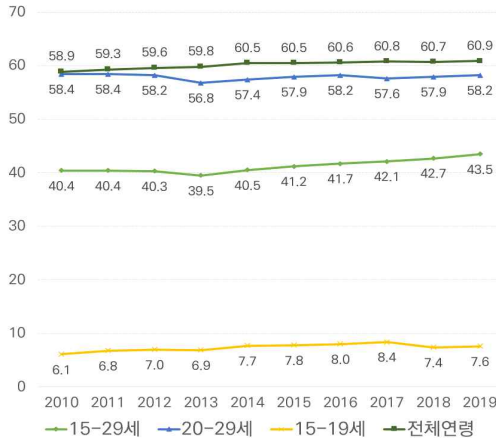
7)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8)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20대의 51.8%는 '학자금 마련'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거비 마련(26.9%), 생활비 마련(12.2%) 순으로 채무가 발생한 반면, 30대에는 주로 주거비 마련(75.7%)을 위해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김형주 외, 2019: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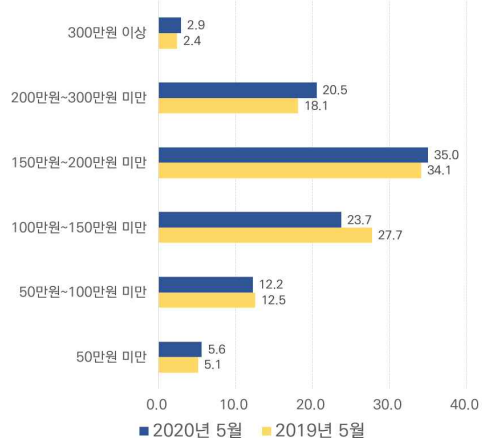
서 감소하여 2019년 1학기 12.6% 수준이다.<sup>9)</sup>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의 1인당 대출 평균 금액은 2013년 1학기 321만원, 2학기 291만원에서 2019년 1학기 260만원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339-345).

[그림 1] 전체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자료: 보건복지부(2019: 118)

[그림 2] 청년(15-29세)의 첫 일자리 월임금



자료: 통계청(2020: 16)에서 재구성

### (3) 청년 불안정성에 대한 선행연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1980년대 이후 거시경제적 변화로 촉발된 생애과정의 탈표준화가 관측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연구는 '이행'과정, 특히 노동시장의 이행에서 관찰되는 이질성과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청년 빈곤과 근로빈곤층, 주거문제, 계층화, 부채 문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먼저 이행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살펴보면,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성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고졸 이하의 청년에게 이행 어려움이 집중된다고 설명한다(Näswall and Witte, 2003; 박성재·반정호, 2012; 변금선, 2012). 부모의 사회계층을 유의미한 변수로 보아 부모세대의 계층과 직업이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경향을 밝힌 연구도 진행되었다(노혜진, 2012; 김종성·이병훈, 2014; 최필선·민인식, 2015; 김영미, 2016; 이경희·민인식, 2016). 젠더관점에서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이질성을 드러내는 연구도 다수 존재하는데, 여성은 1차 노동시장보다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 크며, 결혼이나 출산은 불안정한 노동시장 이행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Vosko et al., 2009; 유정미, 2017; 김안나·홍현우, 2018; 문유진, 2018; 변금선,

9)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혜대상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백만원 수준이며, 2017년 2학기 900,648명을 대상으로 1조 8,435억원을 지급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343-34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이용 비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18; 오유진, 2019).

청년 불안정성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이승윤·이정아·백승호, 2016; 이정아·김수현, 2017) 혹은 이중노동시장 단절 심화(윤윤규·조성훈, 2018)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외에도 구조적 요인의 변화로 인한 청년의 근로빈곤문제에 집중하거나(변금선, 2012; 김문길 외, 2015; 김태완·최준영, 2017; 전경숙 외, 2019), 청년 실업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높은 등록금과 자기계발비, 주거비 부담 등 지출증가가 청년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고,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하기도 한다(이세미·이지연, 2016; 변금선, 2019). 이러한 연구들은 청년층의 불안정 실태와 요인을 밝혀냈다는 의의가 있으나, 다차원적 불안정성을 추적하기에는 단편적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2016)는 청년세대 불평등의 다차원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경제적 불평등, 노동 불평등, 교육 불평등, 취업 불평등의 측면에서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노동 불평등은 아르바이트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소득의 불평등, 워킹푸어(working poor)로 구성된다. 교육 불평등은 대학생 내부의 불평등과 고졸-대졸 청년 간 불평등의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취업 불평등은 가구 소득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정교한 변수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단순한 교차분석과 집단 간 평균비교에 불과하여 총체적 차원에서 실태를 추론하지 못하고 있다. 이승윤 외(2017)의 연구는 청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고용, 소득, 사회보험 측면으로 개념화하고,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퍼지셋 분석방법을 통해 유형화를 진행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의 청년노동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청년과 ‘불안정하지 않은’ 청년의 규모가 증가하여 양극화되고 있으며, 소득 불안정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로지 분석결과, 청년 남성, 저연령, 저학력일수록 불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기존 연구에서 등한시했던 사회적 보호 차원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노동시장에 천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의 불안정성을 고용 차원에서 한정하던 것을 확장하여 소득과 금융 부문을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의 경우 주요 일자리의 근로소득에 한정하던 것에서, 청년기 특성을 반영하여 아르바이트 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도 포함시킬 것이다. 최근 증가하는 청년 부채의 문제는 생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부채 불안정성은 학자금과 생활비, 주거 부담의 증가로 상승 추세에 놓여있다.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고용과 사회적 보호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복지국가에서 불확실한 종사상 지위는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의 불안정성은 열악한 주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생산한다. 모든 영역의 불안정성은 서로 연

계되어 한 차원의 불안정성의 존재는 다른 차원으로 증첩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성을 특정 짓는 핵심 변수라 할 수 있는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청년 불안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년 불안정성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패널(Youth Panel)’<sup>10)</sup>의 1차년도(2007년)부터 12차년도(2018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청년패널은 사회·경제활동, 가구배경, 금융정보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청년 문제를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청년층 불안정성의 궤적을 추적하고 유형화하는 데 필요한 고용 지위, 소득, 부채 변수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자료이다.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청년의 정의는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만19세와 만34세는 전혀 다른 생애주기와 경험을 갖고 있는 이질적인 인구집단이다. 청년은 크게 20대와 30대로 구분할 수 있고, 20대도 학령기 전후와 취업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이 보편화 되면서 학업(대학)을 마무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에 주목하고자, 청년의 정의를 만23세에서 만29세로 한정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청년 문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핵심 인구집단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1984~1989년생 청년으로, 개인 고유 아이디(SAMPID)와 연령을 중심으로 조사년도별 데이터를 병합하였고, 기준 나이(만23세~만29세)로 정렬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자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탈과 무응답 등의 결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설문 이탈의 경우는 표본탈락으로 이어져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무응답 결측은 주로 부채 변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집단중심 추세분석은 결측을 허용하는 불균형 패널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과도한 결측 사례는 분석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7년의 기간 동안 3회 이상의 결측이 발생하는 경우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 3,495명의 분석대상 중 표본 이탈 1,969명과 3회 이상 무응답 결측 635명을 제외한 최종적 분석대상은 총 1,334명이다.

10)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새롭게 구축된 청년패널조사는 전국 청년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여 만15세~29세 청년층 10,206명을 조사하였으며, 69.8%의 표본유지율을 나타내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 2) 주요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년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불안정성으로 고용, 소득, 부채 측면으로 구분된다. 먼저, 고용 불안정성은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며, 노동시장에 통합된 정도에 따라 순위를 산출하였다. 박미희·홍백의(2014)의 연구에서 차용하여 경제활동여부와 종사상 지위를 두 축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0점)에서 순수 비경제활동(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경제활동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미참여 집단 중 순수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시장에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의미에서 가장 높은 불안정 수준인 5점을,<sup>11)</sup>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4점을 부여하였다.<sup>12)</sup>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실업자와 준실업자는 3점을 부과하였다. 18시간 미만의 무급가족종사자는 일을 하고 있지만,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실업자 및 준실업자(3점) 범주에 속한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집단은 종사상 지위를 활용하여 구분하였다.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는 2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는 1점,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0점으로 서열화하였다.

둘째, 소득 불안정성은 청년 삶 전반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청년 개인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임금소득과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을 취합하여 총 월평균소득 변수를 생성하였다. 부모의 소득지원을 의미하는 사적이전소득 역시 청년 내 격차를 반영하는 중요한 소득원이라 판단하여 총소득에 포함하였다.<sup>13)</sup> 이 변수를 활용하여 소득 불안정성은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경우 '안정(0점)',<sup>14)</sup> 생활임금 미만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갖는 경우 '다소 불안정(1점)', 최저임금 미만에서 중위임금의 2/3 이상은 '불안정(2점)', 전체 표본 중위임금의 2/3 미만은 '매우 불안정(3점)'의 4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채 불안정성은 학자금, 주거비용, 생활비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청년패널에서는 부채 문항과 학자금 대출 문항을 통해 청년 개인의 부채 불안정성을 파악할 수

11) 순수비경제활동을 고용 불안정으로 보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4,738천명 중, 재학생인 인구는 3,756천명(79.3%)이고, 취업시험을 준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4천명(17%)에 달했다. 미취업자 중 '그냥 시간을 보냄'이 397천명으로 조사되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다수는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청년니트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장 불안정한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12) 학생을 4점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만23세부터 만29세이고, 2년제의 경우 졸업, 4년제의 경우 졸업을 목전에 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청년이 학생인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고용 측면에서 이행이 지체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해당 시기가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여 경황상태로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3) 참고로 모든 분석대상이 포함된 2012년과 2013년에 대한 데이터 검증 결과, 사적이전소득을 받는 청년은 각각 190명(14.2%)과 123명(9.2%)이고, 평균액은 32.5만원과 43.0만원으로 밝혀졌다.

14) 소득 불안정성의 '안정' 기준인 생활임금은 지방정부 중 가장 높은 서울시의 수준을 채택하였다.

있다. 본 연구는 부채나 학자금에 없는 경우를 '안정(0점)', 있는 경우를 '불안정(1점)'으로 정의하여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아래 <표 1>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변수의 속성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1> 종속변수의 측정

변수명	속성
고용 불안정성	0. 상용직 임금근로, 1. 일용·임시직 임금근로, 2. 비임금근로, 3. 실업자 및 준실업자, 4. 비경활-학생, 5. 순수 비경활
소득 불안정성	0. 안정(생활임금 이상인 경우), 1. 다소 불안정(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2. 불안정(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3. 매우 불안정(전체 표본 중위임금의 2/3 이하인 경우)
부채 불안정성	0. 부채없음, 1. 부채있음

본 연구에 활용된 독립변수는 성별, 학력, 계층, 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이다. 성별 변수는 남과 여, 학력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층은 하위 20%, 중간 60%, 상위 20%,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 광역시, 시도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거시경제적 변화로 인해 청년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이질적 양태로 변화할 것이라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고용, 소득, 부채 불안정성의 궤적을 살펴보고자,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Group-based Multi-trajector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은 집단중심 추세분석의 가장 발전된 형태로, 기존에 단일 변수만을 분석하던 것에서 둘 이상의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유연성과 명확성을 높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Nagin, Jones, Passos, and Tremblay, 2016). 집단중심 추세분석은 연령이나 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유한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개인이 각 시점에 특정 궤적 집단에 포함될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한다(Nagin, 2005: 24). 모집단의 궤적 분포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J개로 구성된 유한개의 혼합 모델(finite mixture model)을 상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궤적집단의 수와 규모를 비모수적으로 추정하고, 각 집단의 궤적을 다항함수를 통해 유추한다.

분석의 추세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과 같다(Nagin et al., 2016: 2018). 개인(i)들의 이질적인 추세 궤적을 도출하기 위해 연령 혹은 시간을 조건으로 한 종속변수의 분포는 식 (1)과 같다. '중

속변수 추세 결과의 확률분포( $P(Y_i^k | Age_i)$ )는 '집단 j에 속할 확률( $\pi_j$ )'과 '집단 j에 속한 개인(i)이 연령과 추세의 형태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beta_j^k$ 에 의해 조정되는 조건부확률( $P_k(Y_i^k | Age_i, j; \beta_j^k)$ )'의 곱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Nagin et al., 2016: 2017). 조건부확률( $P_k(Y_i^k | Age_i, j; \beta_j^k)$ )은 식 (2)와 같이 개인(i)이 매 시점(t)에서 갖는 확률밀도함수의 곱으로 정의된다(Nagin et al., 2016: 2018).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은 조건부 독립(conditional independence)을 가정하기 때문에, 모든 변수가 동일한 횟수로 같은 시점에 측정되지 않아도 된다.

$$P(Y_i^1, Y_i^2, \dots, Y_i^K | Age_i) = \sum_{j=1}^J \pi_j \left[ \prod_{k=1}^K P_k(Y_i^k | Age_i, j; \beta_j^k) \right] \quad (1)$$

$$\text{with } P_k(Y_i^k | Age_i, j; \beta_j^k) = \prod_{t=1}^{T^k} p_k(y_{it}^k, j; \beta_j^k) \quad (2)$$

확률밀도함수를 통해 궤적함수를 추정하고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어떤 분포를 갖는지 확인해야 한다. 종속변수가 횡수이면 포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 최대 값과 최소값이 있는 척도 변수의 경우는 절단정규분포(Censored Normal Distribution), 이분 변수이면 이분형로짓 분포(Binary Logit Distribution)를 이용해 궤적함수를 추정한다(Nagin, 2005). 본 연구의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 불안정성은 서열변수로 가정하여 추세 궤적을 절단정규분포로 추정하였다.<sup>15)</sup> 부채 불안정성은 이분변수이므로 이분형로짓 분포로 규정하였다.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에서 최적 모형을 산출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변화 궤적의 집단 유형을 규정해야 한다. 최적 유형의 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통해 집단의 수를 1에서부터 증가시키며,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변화량을 산출한 뒤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하는 방법을 통해 결정한다(Nagin, 2005: 68-70). 본 연구에서는 Jones et al.(2001)의 기준에 따라 BIC의 변화량이 3 이상이거나 각 집단별 구성비가 모두 5% 이상인 경우 최적 유형수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이행 궤적에 대한 함수식을 설정하는데, 궤적의 모형에 따라 상수, 1차(linear), 2차(quadratic), 3차(cubic) 함수가 모두 가능하다. 주로 3차 함수가 많이 사용되는데, 현실에서 변화의 궤적은 비선형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이다(Nagin, 2005: 62). 마지막으로 사후배정확률(Posterior Probability) 통해 개인이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사후확률이 높은 경우

15) 고용 불안정성은 엄격한 의미에서 범주형 변수이지만, 각 지위의 상태를 노동시장에 대한 통합 정도 또는 지위의 속성으로 평가하면 0점부터 5점까지의 범위를 갖는 서열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Jones and Nagin, 2007; 박미희·홍백의, 2014; 변금선, 2018).

개인들이 군집된 변화궤적의 유형에 효율적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7 이상인 경우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Nagin, 2005: 88). 할당 정확도의 오즈비는 5 이상인 경우 충분하다(변금선, 2018). 분석의 전 과정에 사용된 통계 패키지는 Stata 16이다.

## 4. 분석결과

###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청년패널(YP2007)의 1984년생부터 1989년생으로 총 1,334명이고, 분석기간은 만23세에서 만29세까지 7년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살펴보았다.

〈표 2〉 분석대상의 출생연도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합계
전체		263	237	190	231	200	213	1,334
성별	남	133 (50.6)	80 (33.8)	28 (14.7)	31 (13.4)	29 (14.5)	36 (16.9)	337 (25.3)
	여	130 (49.4)	157 (66.2)	162 (85.3)	200 (86.6)	171 (85.5)	177 (83.1)	997 (74.7)
학력	고졸	44 (16.7)	28 (11.8)	28 (14.7)	18 (7.8)	23 (11.5)	36 (16.9)	177 (13.3)
	전문	87 (33.1)	60 (25.3)	51 (26.8)	79 (34.2)	59 (29.5)	61 (28.6)	397 (29.8)
	대졸	132 (50.2)	149 (62.8)	111 (58.4)	134 (58.1)	118 (59.0)	116 (54.3)	760 (57.0)
	대졸							
	이상							
계층	상위 20	48 (18.3)	42 (17.7)	43 (22.6)	53 (22.9)	56 (28.0)	57 (26.8)	299 (22.4)
	중위 60	182 (69.2)	157 (66.2)	103 (54.2)	138 (59.7)	97 (48.5)	94 (44.1)	771 (57.8)
	하위 20	33 (12.6)	38 (16.0)	44 (23.2)	40 (17.3)	47 (23.5)	62 (29.1)	264 (19.8)
지역	수도권	118 (44.9)	89 (37.6)	77 (40.5)	99 (42.9)	86 (43.0)	82 (38.5)	551 (41.3)
	광역시	97 (36.9)	102 (43.0)	87 (45.8)	94 (40.7)	74 (37.0)	94 (44.1)	548 (41.1)
	시도	48 (18.3)	46 (19.4)	26 (13.7)	37 (16.5)	40 (20.0)	37 (17.4)	235 (17.6)

〈표 2〉는 분석대상의 출생연도에 따른 성과 학력, 계층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은 여성이 74.7%(997명)로, 남성(25.3%; 337명)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편향은 1985~1989년 코호트의 청년패널 원자료의 특성에 기인한다.<sup>16)</sup> 교육수준은 고졸이 13.3%(177명), 전문대졸이 29.8%(397명), 대졸이상인 57.0%(813명)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86.8%에 달해 우리나라 청년의 고학력화 현상을 반영한다.<sup>17)</sup> 경제적으로 상위 20 계층은 22.4%(299명), 중위 60은 57.8%(771명), 하위 20은 19.8%(264명)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의 수도권과 광역시, 시도는 각각 41.3%(551명), 41.1%(548명), 17.6%(235명)이다.

〈표 3〉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단위: 명, %)

구분		23	24	25	26	27	28	29
고용 불안정	순수비경활	119 (8.9)	141 (10.6)	131 (9.8)	120 (9.0)	92 (6.9)	128 (9.6)	165 (12.4)
	비경활-학생	528 (39.6)	309 (23.2)	156 (11.7)	70 (5.3)	23 (1.7)	10 (0.8)	9 (0.7)
	실업자 및 준실업자	38 (2.9)	64 (4.8)	64 (4.8)	55 (4.1)	30 (2.3)	13 (1.0)	20 (1.5)
	비임금근로	12 (0.9)	12 (0.9)	31 (2.3)	46 (3.5)	51 (3.8)	51 (3.8)	58 (4.4)
	임시일용직	151 (11.3)	154 (11.6)	143 (10.7)	129 (9.7)	129 (9.7)	120 (9.0)	100 (7.5)
	상용직	486 (36.4)	652 (49.0)	808 (60.6)	913 (68.5)	1,009 (75.6)	1,012 (75.9)	982 (73.6)
	임금근로							
	총합	1,334 (100)	1,332 (100)	1,333 (100)	1,333 (100)	1,334 (100)	1,334 (100)	1,334 (100)
	소득 불안정	매우 불안정	956 (71.7)	761 (57.1)	530 (39.7)	411 (30.8)	275 (20.6)	244 (18.3)
불안정		225 (16.9)	311 (23.3)	353 (26.5)	330 (24.7)	299 (22.4)	248 (18.6)	164 (12.3)
다소 불안정		109 (8.2)	161 (12.1)	260 (19.5)	323 (24.2)	387 (29.0)	383 (28.7)	363 (27.2)
안정		44 (3.3)	101 (7.6)	191 (14.3)	270 (20.2)	373 (28.0)	459 (34.4)	537 (40.3)
총합		1,334 (100)	1,334 (100)	1,334 (100)	1,334 (100)	1,334 (100)	1,334 (100)	1,334 (100)
부채 불안정	부채있음	173 (23.4)	81 (9.4)	61 (6.1)	65 (5.9)	74 (6.2)	88 (7.4)	89 (7.8)
	부채없음	566 (76.6)	784 (90.6)	943 (93.9)	1,036 (94.1)	1,125 (93.8)	1,098 (92.6)	1,053 (92.2)
	총합	739 (100)	865 (100)	1,004 (100)	1,101 (100)	1,199 (100)	1,186 (100)	1,142 (100)

16) 청년패널의 특성으로 남성의 군입대로 인해 대규모 이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17) 참고로 2019년 기준 OECD에서 발표한 고등교육 이수율(69.8%)보다 더 높은 수치로 파악되었다(교육부, 2020).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을 살펴보기에 앞서, 종속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분석은 <표 3>과 같다. 종속변수의 빈도나 평균값을 확인함으로써 청년 불안정성의 분포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의 증가와 함께 청년 불안정성이 감소하고 있었다.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이행기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청년 집단을 평균이나 빈도라는 단순 수치로 환산하는 경우, 집단 내 복합적 양상과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집단으로 가려진 개인의 추세를 살펴보고, 이질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청년 개인의 궤적을 유형화하여, 집단 내부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청년 불안정성 궤적의 유형과 특성

전체 분석대상에 대한 고용, 소득, 부채 불안정성의 궤적을 바탕으로 유형화를 실시한 결과, 총 6개의 집단이 도출되었다. 아래 <표 4>는 전체 분석대상의 최적 유형수의 산출과정과 집단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집단의 수를 늘려감에 따라 BIC의 절대값이 줄어들었으며,  $\ln\Delta BIC$ 이 3을 초과하였다. 8개 집단으로 증가시킬 때까지 BIC의 절대값이 줄어들고,  $\ln\Delta BIC$ 이 3을 초과하며, 집단 분포가 모두 5%를 넘었지만, 분산행렬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여 최적 집단의 수를 6개로 선택하였다. 각 집단의 구성비는 모두 5% 이상으로, Jones et al.(2001)의 모형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여, 6개의 유형을 최종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이행 궤적에 대한 함수식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적용해보면서, BIC값의 절대값이 가장 작게 도출되어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3차항, 3차항, 3차항, 3차항, 3차항, 2차항으로 설정하였다.

<표 4> 전체 분석대상의 최적 유형화 추정

	최적 유형수 산출			집단 구성비(%)					
	함수 차수 (궤적모양)	BIC (N=1,334)	$\ln\Delta BIC$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1	3	-27240.14	-	100	-	-	-	-	-
2	33	-25927.68	7.18	48.7	51.3	-	-	-	-
3	3 3 3	-25114.45	6.70	43.7	38.4	18.0	-	-	-
4	3 3 3 3	-24798.33	5.76	14.8	15.0	34.9	35.4	-	-
5	3 3 3 3 3	-24484.75	5.75	12.3	33.0	11.6	15.6	27.6	-
6	3 3 3 3 3 2	-24267.77	5.38	12.2	29.0	9.3	10.4	29.8	9.3

다음으로 집단의 모형적합도는 <표 5>과 같다. 개별 사례들이 각 집단에 배정될 평균 사후 확률(Average Posterior Probabilities)을 검증한 결과, 0.92~0.94로 나타나 전체 분석대상이 궤적 집단에 알맞게 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할당 정확도의 오즈값 역시 모두 5 이상이었으며, 궤적 집단의 추정 분포와 실제 표본 분포도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표 5> 집단의 모형적합도**

	평균 사후확률	할당 정확도 오즈	각 유형에의 할당	
			추정(%)	표본(%)
1	0.92	86.59069	12.3	12.2
2	0.92	29.84089	28.9	29.0
3	0.93	120.9483	9.5	9.3
4	0.92	93.40321	10.6	10.4
5	0.94	35.11658	29.7	29.8
6	0.92	118.4393	9.1	9.3

이상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최적 모형의 유형을 고용, 소득, 부채 불안정성의 변화 궤적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청년 불안정성 궤적의 유형은 ‘초기안정진입형’, ‘소득불안정형’, ‘중기불안정진입형’, ‘중기안정진입형’, ‘후기안정진입형’, ‘만성불안정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궤적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구성비도 <표 6>에 제시하였다. 집단 중심 다중추세분석은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분석대상인 개인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각 유형이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구성비를 갖는지 확인하는 일은 해당유형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먼저 ‘초기안정진입형’은 만24세에 상용직 임금노동에 진입하면서, 고용과 부채 불안정성의 정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소득 불안정성은 완만하게 감소하여 만26세 이후 안정권에 진입하는 유형이다.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되어, 상대적으로 빠른시간 안에 불안정성이 해소된 집단으로,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 학령기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지만, 현실적으로 10명 중 1명만이 이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초기안정진입형의 집단 내부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 6>을 참고하면, 성별과 지역별 차이가 없었지만, 학력과 계층을 기준으로 하위 항목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먼저 학력의 경우, 대졸(13.4%)이 고졸(9.6%)이나 전문대졸(11.6%)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높은 학력이 소득 불안정성의 빠른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큰 차이는 계층 간 격차에서 부각된다. 상위 계층의 21.4%가 이 유형에 포함되어, 중위 계층(9.6%)이나 하

위 계층(9.8%)보다 초기안정진입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계층일수록 불안정성이 빠르게 해소되는 것이다.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초기안정진입형에 포함될 확률은 고학력일수록, 상위 계층일수록 높다고 할 수 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예증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소득불안정형'은 고용과 부채 불안정성이 초기에 안정적인 수준까지 낮아지지 않, 소득 불안정이 지속되는 집단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소득 불안정 정도가 일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20대 내에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안정적인 고용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고용된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지 않다는 의미이다. 전체의 1/3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노동 소득분배율과 저임금으로 상징되는 노동시장의 현실이, 비전형 노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용직 일자리까지 확산된 것이다. 더욱이 저임금 현상이 직업 경력 초기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들이 진입하는 노동시장에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충분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노동시장 이행 유형만 살펴보았을 때 포착하지 못했던(박미희·홍백의, 2014), 상용직 임금근로의 임금 불안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부각된다. 선행연구(변금선, 2018)와 달리 고용과 소득의 궤적을 분리하여 다양한 조합을 살펴봄으로써 세분화된 결과와 구체적인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득불안정형의 인구사회학적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성(31.5%)이 남성(21.1%)에 비해 소득 불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10%p 더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으며, 여성 청년 역시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혹은 직종 간 성별 분리로 인해, 여성은 저숙련, 저임금의 서비스 직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과 전문대졸이 각각 37.9%, 40.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저학력이 낮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이중노동시장 구조에 기인한다. 1차 노동시장에의 진입은 여전히 고학력이고 남성일수록 유리하다. 지역별로도 광역시와 시도에서 높은 비율(34.5%, 27.7%)이 두드러졌는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의 노동시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기불안정진입형'은 전체의 9.3%가 속한 집단이다. 이에 속한 청년들은 임시·일용직 일자리(1점)를 유지하다,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비경활-학생(4점)이나 순수비경활(5점)로 진입한다. 노동시장 이탈과 더불어 소득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특징을 갖는다. 부채 불안정성도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 속한 청년들은 26세 이후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몇 가지 사례를 유추하면, 먼저 임시·일용

직 임금노동이라는 불안정 고용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노동시장을 스스로 이탈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비정규직 형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혹은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그만두고 노동시장을 이탈하였을 수도 있다. 자발적 이탈이 아닌 상황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에게는 불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경력단절로 이어진다면 남은 생애주기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편, 더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으며, 상용직 일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존재할 수 있다. 하나의 일자리에 얽매이지 않는 비교적 자유로운 현시대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이탈이 '강제화 된'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선택은 자발적으로 보이지만, 근무 조건이나 근무 환경 등이 열악한 것에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개인의 불안정성이 다차원적으로 증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중기불안정진입형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11.2%)이 남성(4.2%)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궤적에서 쉽게 관측되는 M자 곡선의 시작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과 전문대졸이 각각 10.2%, 14.9%로 대졸(6.4%)보다 높았는데, 더 높은 학위를 위해 노동시장을 이탈하거나, 비전형 고용의 계약 만료 혹은 스스로 이탈한 경우를 유추할 수 있다.

'중기안정진입형'과 '후기안정진입형'은 중·장기의 취업준비기간을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교육연수가 길어진 대졸 이상 청년들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이 고학력화되면서 충분히 긴 기간의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5년까지 별도의 취업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간 단절로 인해 성급하게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 진입하면 일자리의 상향이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초기 일자리 경력이 인적자본 축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이직 시 다른 고용주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 경력 초기 낮은 수준의 일자리가 '함정' 혹은 '오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한요셉, 2017: 72).

'중기안정진입형'은 취업준비 등으로 실업자 및 준실업자(3점)를 유지하다 만25세 정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집단으로 전체의 10.4%가 속해 있다. 상용직 임금노동을 통해 안정화된 상태가 되기 전까지 고용과 소득, 부채 불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출발선은 가장 불안정한 집단이라 볼 수 있다. '후기안정진입형'은 중기안정진입형과 같이 취업준비 등(준)실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다, 만27~28세에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집단이다. 전체의 29.8%가 분포하고 있어 가장 다수의 청년이 속해 있는 유형이다. 후기안정진입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취업준비의 장기화가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두 유형과 같이 안정적 고용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면, 빈곤이나 주거 문제, 삶의 질의 저하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 효과의 존재는 이를 감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장기화되는데, 국가 차원의 개입이 없다면 모든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온전히 가구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은 늦어지는 한편, 부모세대의 노동시장 은퇴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화된 취업준비기간을 보완하기 위한 광범위한 차원의 소득보장정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20대 후반이 되면 많은 청년의 고용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학령기 이후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되어, 청년의 불안정성 문제는 만23~28세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전환, 노동시장 유연화, 이중화된 노동시장의 심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질 경우 10년 동안 연평균 임금이 4~8%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어(한요셉, 2017), 장기적으로 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행기간의 증가 양상은 청년기에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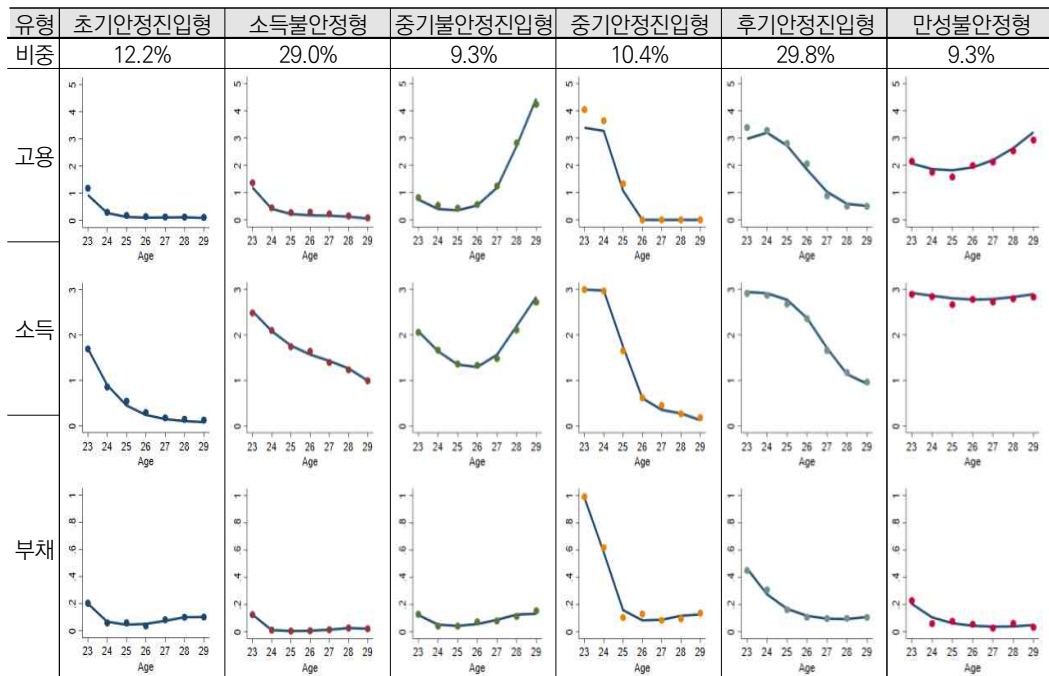
중기·장기안정진입형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살펴보면, 두 유형 모두에서 남성(17.2%, 40.4%)이 여성(8.4%, 26.1%)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고용안정이 소득안정으로 이어지는 두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이 두 유형보다 소득불안정형(31.5%)에 집중되어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임금 차별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두 유형 모두 대졸 이상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 혹은 전문대를 졸업하는 경우보다 교육연수가 더 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수도권이 각각 12.3%, 31.0%를 차지하여 전체 평균(10.6%, 29.7%)보다 높았다. 수도권이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성불안정형'은 노동시장 경계에서 지속적인 불안정 고용을 경험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20대 후반까지 비임금근로나 임시·일용직 임금근로, (준)실업자 지위를 반복하며,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은 소득 불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채 불안정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안정한 고용 지위가 부채 접근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비중도 9.3%에 이르러 적지 않은 청년이 만성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만성불안정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중노동시장의 존재로 일자리 상향이동이 어려워 불안정 고용을 전전하는 경우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만성불안정형도 남성(5.9%)보다 여성(10.1%)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성별 격차가 포착되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불안정한 고용지위와 소득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학력 별로는 고졸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 낮은 학력이 만성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고졸 청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 불안정을 다룬 남재욱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압박 하에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 시장에 밀려난 경우가 다수이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임금·비숙련 일자리에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적 빈곤에 시간빈곤과 인적자본의 빈곤이 더해져 장기적 관점에서 불안정성의 해소가 쉽지 않은 집단이다. 이들에게는, 소득지원과 함께, 충분한 진로 탐색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도 시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지방의 노동시장 상황이 대도시에 비해 좋지 않다는 증거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 전체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 유형 (N=1,334)



〈표 6〉 전체 청년 불안정성 유형별 특성

(단위: 명, %)

구분		초기안정 진입형	소득 불안정형	중기불안정 진입형	중기안정 진입형	후기안정 진입형	만성 불안정형	합계
전체		164 (12.3)	385 (28.9)	126 (9.4)	142 (10.6)	396 (29.7)	121 (9.1)	1,334 (100)
성별	남	38 (11.3)	71 (21.1)	14 (4.2)	58 (17.2)	136 (40.4)	20 (5.9)	337 (100)
	여	126 (12.6)	314 (31.5)	112 (11.2)	84 (8.4)	260 (26.1)	101 (10.1)	997 (100)
학력	고졸	17 (9.6)	67 (37.9)	18 (10.2)	5 (2.8)	41 (23.2)	29 (16.4)	177 (100)
	전문 대졸	46 (11.6)	160 (40.3)	59 (14.9)	9 (2.3)	86 (21.7)	37 (9.3)	397 (100)
	대졸 이상	101 (13.4)	158 (20.8)	49 (6.4)	128 (16.8)	269 (35.4)	55 (7.2)	760 (100)
	상위 20	64 (21.4)	79 (26.4)	35 (11.7)	31 (10.4)	68 (22.7)	22 (7.4)	299 (100)
계층	중위 60	74 (9.6)	237 (30.7)	63 (8.2)	79 (10.2)	242 (31.4)	76 (9.9)	771 (100)
	하위 20	26 (9.8)	69 (26.1)	28 (10.6)	32 (12.1)	86 (32.6)	23 (8.7)	264 (100)
지역	수도 권	76 (13.8)	131 (23.8)	57 (10.3)	68 (12.3)	171 (31.0)	48 (8.7)	551 (100)
	광역 시	56 (10.2)	189 (34.5)	45 (8.2)	52 (9.5)	157 (28.6)	49 (8.9)	548 (100)
	시도	32 (13.6)	65 (27.7)	24 (10.2)	22 (9.4)	68 (28.9)	24 (10.2)	235 (100)

이상으로 전체 집단의 최적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청년들은 다양한 양상의 궤적을 보이며, 각기 다른 수준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초기에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집단인 ‘초기안정진입형’의 12.2%를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불안정성이 관측되었다. 전반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의 해소는 소득 불안정이나 부채 불안정의 감소로 이어지고, 20대 후반에 이르면 다수의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안정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기의 문제가 학업을 종료하고 노동시장 진입이전의 시기인 20대의 중후반에 집중되고 있음을 드러내며, 장기화되는 취업준비 기간의 현실을 반영한다.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7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동반되는 불안정성은 각종 기회요인과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부채 불안정성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중기안정진입형’이나 ‘후기안정진입형’의 연령 초반에만 부각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자금 대출을 청산하는 시점을 알 수 없는 데이터의 한계로, 학령기가 지난 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단일 시점에 횡단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확인할 수 없었던, 청년 불안정성의 동태성과 이질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청년 불안정성이 본격적으로 이행기를 경험하는 만23~28세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수 청년들은 이 기간을 넘으면 불안정성이 다소 완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약 20%의 청년은 그 수준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거나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불안정한 집단이라 볼 수 있는 만성불안정형이나, 소득불안정형, 중기불안정진입형에는 여성과 고졸, 전문대졸 청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 불안정성의 배경을 추적하고, 실제로 청년 불안정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현되는지 확인하여, 심각해지는 청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에 앞서 청년 불안정성을 ‘청년기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소득, 부채와 관련된 안전성이나 안정성의 결여’라고 정의하였고, 청년패널 자료에 대한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을 통해 궤적과 유형을 도출하여, 청년 불안정성의 동태성과 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전술한 연구문제를 토대로 실증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 불안정성은 연령에 따라 상이한 수준과 양상을 가진 6개 집단인 ‘초기안정진입형’, ‘소득불안정형’, ‘중기불안정진입형’, ‘중기안정진입형’, ‘후기안정진입형’, ‘만성불안정형’으로 분류되어, 모든 청년이 표준화된 이행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초기에 모든 불안정성이 안정 상태로 감소하는 약 12%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청년은 일정 수준의 불안정성을 경험한다. 특히 청년기 불안정성은 만23세에서 만28세에 집중되고 있으며, 만29세에는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시장 이행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학령기를 마친 청년의 고용과 소득, 부채 차원의 불안정성이 4년에서 6년간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청년 불안정성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보다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청년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중노동시장이나 제도적 이중구조화 등의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기간이 길어진 것은 이중노동시장의 존재로 인해 일자리 상향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기업규모별 분절을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은 퇴출되



어야 할 기업까지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제도적 이중구조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사회적 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소득 보험 방식의 전환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용지원 위주의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취업 연계를 위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처럼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정책의 실행은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계적 중소기업들을 연명시키는 방식의 청년인턴제나 청년고용장려금도 청년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거시적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한요셉, 2017). 실제로 청년들은 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 상담과 진단 검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반적 지원방식 중 수당만 직접적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노사정위원회 청년고용협의회, 2017). 양적 성과지표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청년들을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 무리하게 입직시킬 경우, 향후 경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청년기의 불안정성이 생애주기로 확산될 수 있다.

셋째,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불안정성은 만23세에서 만28세 사이에 집중되는 보편적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안정이 유지되는 청년의 비중도 전체의 약 40% 이상으로 근로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면서, 약 22%의 청년이 수혜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고용을 기반으로 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청년 빈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서울시 청년수당, 강원도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는 보편적 소득 보장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최근 노동소득분배의 악화로, 자본소득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분별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누구나 건전한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득원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악화된 노동소득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상보성을 고려한 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급격하게 유입된 한편,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정성 보장을 위한 고용보호제도 등은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신규 채용을 꺼리게 만들거나, 인턴과 같은 단기 계약직을 양산하였다. 실제 경제위기 이후 신규 채용보다는 증장년층이 청년층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증대하고, 경력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이병희, 2003). 청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할 때는 그 정책의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까지 고민하여 상보성

을 갖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부채 변수의 조작화와 관련이 있다. 해당 변수는 패널설문지의 학자금과 부채 유무 문항을 통해 이항변수로 구성하였다. 연속변수로 구성하여 다른 변수와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으나, 원자료에서 부채 액 변수의 결측률이 너무 높아 활용할 수 없었다. 한편, 학자금 항목의 경우도 패널 자료의 구성 상 교육기간 중 대출유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청산 시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으로 학자금 대출이 발생한 시점만 불안정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다만, 학자금 대출은 청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실에서는 부채의 감소가 분석결과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설문지 구성과 관련하여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청년 불안정성을 총체적으로 정의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학문적 외연을 확장하고, 청년 불안정성의 중단적 궤적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정책의 개입 시기를 모색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 교육부 (2020). 「OECD 교육지표 2020」 결과발표. 교육통계과 보도자료. 1-14.
- 김교성 (2016).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비판사회정책*. 52. 179-222.
-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도균 (2018).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문길, 김미곤, 김태완, 최민정, 이세미 (2015). 청년근로빈곤층 사례연구. 서울: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 김안나, 홍현우 (2018). 청년 빈곤 및 고용실태 분석. *사회복지연구*. 49(2). 93-124.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유선 (2017).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7(10). 1-21.
- 김종성, 이병훈 (2014).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전망*. 90. 296-330.
- 김태완, 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017(2). 6-19.
- 김태호(역) (2014). 프리캐리야트.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경기: 박종철출판사.
-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 (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21-262.
- 노사정위원회 청년고용협의회 (2017).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청년간담회 결과. 2017년 1월 24일.
- 노혜진 (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 109-134.
- 문유진 (2018). 청년문제의 심화와 정부의 청년정책. 한국노사관계학회학술대회자료집. 17-27. (2018. 2. 23).
-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 박성재, 반정호 (2012). 청년 취업자의 저임금근로 진입과 탈출에 관한 연구 노동이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8(1). 163-190.
- 변금선 (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3). 257-279.
- \_\_\_\_\_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변화: 1960-1980년대 청년 코호트의 노동 궤적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9). 청년의 부채부담 변화에 관한 연구: 출생코호트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43-149. (2019. 9. 26).
- 보건복지부 (2019).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 오욱찬, 김현경 (2020). 청년층의 자산 및 부채 보유 실태와 특성. 정해식 외.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3: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3-284.
- 오유진, 김교성 (2019). 성별·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비교. *노동정책연구*. 19(3). 1-35.
- 원승연 (2015).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2(3). 41-72.
- 유정미 (2017).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한국여성학*. 33(1). 107-155.
- 윤홍식 (2019).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3.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경희, 민인식 (2016). 직업 및 소득 계층의 세대 간 이전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세미, 이지연 (2016). 청년의 부채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85-299. (2016. 9. 23).
-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 이승윤, 백승호, 김운영 (2017).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서울: 후마니타스.
- 이정아, 김수현 (2017). 정규직의 허구적 안정성과 청년의 불안정성. 경제와사회. 114. 194-224.
- 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장경덕(역) (2015). 불평등을 넘어. Atkinson, A. B. (2015). *Inequality: what can be done?* 서울: 글항아리.
- 전경숙, 송영호, 채창균 (2019).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민우, 이나영 (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한국사회학. 45(2). 130-175.
-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서울: 책세상.
- 최은영 (2014). 서울의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복지 소요. 도시와 빈곤. 106. 5-61.
- 최필선, 민민식 (2014).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연구. 22(3). 31-56.
- 통계청 (202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한국고용정보원 (2019). YP2007 1~12차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고용정보원.
- 한요셉 (2017).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시사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한영섭, 이유란 (2015). 청년층 부채악성화 경로추적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 청년허브 기획연구.
- Antonucci, L., Hamilton, M. & Robert, S. (2014). *Young people and social policy in Europe: Dealing with risk, inequality and precarity in times of crisi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Crouch, C. (2009). Privatised Keynesianism: an unacknowledged policy regime.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009(11). 382-399.
- Frade, C., Darmon, I. & Laparra, M. (2004). *Precaire employment in Europe: A comparative study of labour market related risk in flexible economie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ILO (2012). *The youth employment crisis: a call for action*, Geneva: ILO.
- Jones, B., Nagin, D. & Roeder, K. (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9(3). 374-393.
- Maestripieri, L & Sabatinelli, S. (2014). Young people experiencing work precariousness: risks and opportunities. Antonucci et al. *Young people and social Policy in Europe: Dealing with Risk, Inequality and Precarity in Times of Crisi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Matsumoto, M., Hengge, M. & Islam, I. (2012). Tackling the youth employment crisis: a macroeconomic perspective. *Employment Working Paper*. 124. Geneva: ILO.
- Mills, M. & Blossfeld, H. (2005),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Blossfeld et al.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The losers in a globalizing world*. UK: Routledge.
- Nagin, D.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agin, D., Jones, B., Passos, V. & Tremblay, R. (2016).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

Statistical Methods in Medical Research. 1-9.

Näswall, K. & De Witte, H. (2003). Who feels insecure in Europe? predicting job insecurity from background variables.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24(2). 189-215.

OECD (2016).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 connecting people with jobs*.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Rodgers, G. & Rodgers, J. (1989). *Prec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the growth of atypical employment in Western Europe*. ILO.

Regini, M. (2000). The dilemmas of labour market regulation. Esping-Anderson & Regini, M. *Why deregulation labor marke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uth, S. & Jahn, K. (2020). Young, successful, precarious? precariousness at the entry stage of employment careers in Germany. *Journal of Youth Studies*. 236. 702-725.

Vosko, L., MacDonald, M. & Campbell, I. (2009). *Gender and the contours of precarious employment*. NY: Routledge.

◀ Abstract ▶

## Typologies of Youth Precarious Trajectories: Focused on Employment, Income, and Debt of Twenties

Nari Park\* · Kyo-seo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classify the aspects of youth precariousness based on the longitudinal trajectory to present a policy direction to overcome the youth crisis. Youth precariousness can be defined as 'a lack of security or stability related to employment, income, and debt that can occur universally among young people'. As a result of a Group-based Multi-trajectory Analysis based on the merging data of young people aged 23 to 29 from the Youth Panel Survey (YP), it was possible to captur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youth precariousness and the heterogeneity within the group. The analysis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rajectories and typologies of precariousness experienced by young people were classified into 6 different groups according to the changing patterns. All young adults experienced some level of instability, except for about 12%, where all precariousness initially declined to a steady state. In particular, youth precariousness is concentrated from 23 to 28 years of age, and overall instability level is found to ease at the age of 29.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dual labor market or the institutional dual structure problem in order to cope with the fundamental problem of employment instability. It is also essential to find ways to expand the distribution of youth basic income or capital income as an alternative to the problem of income instability.

**Keywords:** Youth Precariousness, Employ Instability, Income Instability, Debt Instability, Group-based Multi-trajectory Analysis

◆ 2021. 7. 29. 접수 / 2021. 8. 26. 1차수정 / 2021. 9. 9. 게재확정

---

\* First Author, Ph.D. Candidate, Dep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skfl745@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kyoseong@cau.ac.kr)